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경제 불평등과 이민 유입에 따른 정체성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다양성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은 한국도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자 집단 포용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납세를 받아들일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은 시계열적으로 명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의사는 2013년 이후 늘어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양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정도로 인종(race) 및 종족(ethnicity) 기준 다양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종교의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 기준으로 차별과 배제가 생긴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정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한국의 사회 다양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에서도 학업 능력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인다.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은 외국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된 상황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이질성을 심화시켰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단일민족’이라는 유대감은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다양성 인식은 민주주의의 국가인 한국 사회의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덧붙여 경제 불평등 심화로 유발되는 계급 간 격차를 포용하는 작업, 가치관의 변화로 목소리를 높여가는 소수자(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작업, 유교문화와 시장논리가 얽힌 경제발전 과정에서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자녀, 그리고 일탈행위를 저지른 전과자를 배제하지 않는 작업이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는 그 구성원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담긴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 중에서 (1) 경제 불평등, (2) 국가 정체성, (3) 사회 전통 및 규범 차원에서 포용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치 이념 및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추가로 검토하여 낚임스 있는 해석을 시도해 본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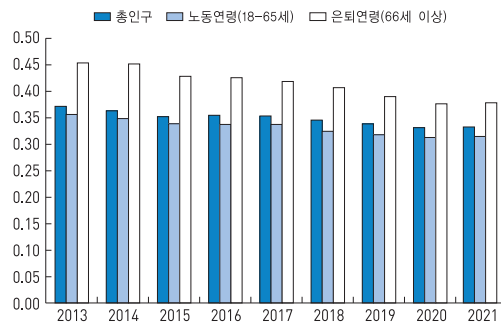
경제 불평등과 포용

최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체제의 불안 겪고 있다. 불안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학자들은 심화된 경제 불평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자유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 불평등은 완화된 면도 없지 않지만,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 안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외국으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한 때 중산층의 지위를 누렸던 자국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충실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의 타격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 정책 결정과정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XI-13]은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의 시

계열적 추이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인구, 노동연령 인구, 은퇴연령 인구 기준 모두에서 한국의 세금 공제 후 경제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경제 불평등 인식은 반드시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현실과 인식 간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한국의 세후 경제 불평등 정도는 점점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임은 명확하다.

[그림 XI-13] 지니계수, 2013-2021



주: 1)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금공제 및 이전 후): 총 인구, 노동 연령 인구(18-65세),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로 구분하였음.

2)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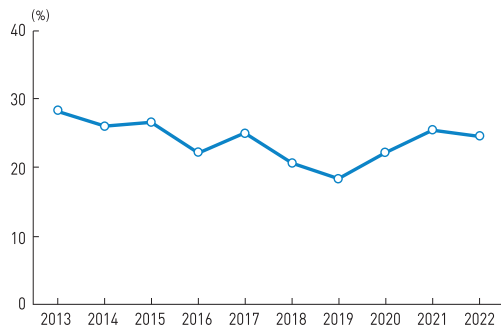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지 않은 한국에서 경제 불평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XI-14]는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1순위로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

1) 정치이념은 5점 척도(매우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매우 진보)로 물어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다.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28%대를 유지하다가 감소한 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2013~2015년, 2017년, 2021년에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시민들의 비율이 상당함을 시사해 준다.

[그림 XI-14] 빈부격차를 대표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기타' 중 '빈부격차'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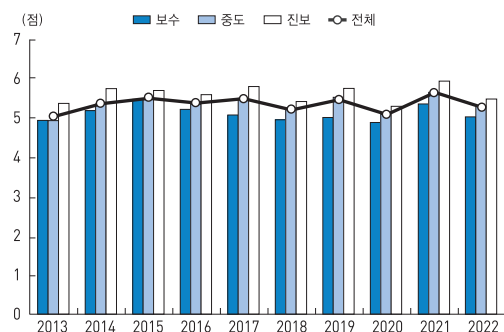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재분배이다. [그림 XI-13]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 조세제도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최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관적인

인식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림 XI-15]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납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다.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 대비 2022년 응답자들의 추가납세 의향에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응답 패턴에 일관성은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추가납세 의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나, 2016년부터 결과를 보면 작수연도에는 하향, 홀수연도에는 상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중도 성향의 응답자가 초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 정도의 추가납세 의향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 성향의 응답자와

[그림 XI-15] 이념 성향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낼 의향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유사한 수준의 추가납세 의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 성향 응답자의 응답 패턴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중도 성향의 시민들은 진보 성향의 시민들과 유사한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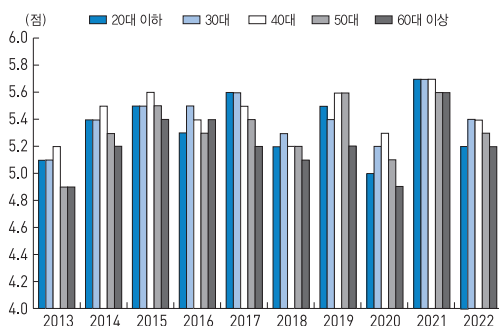
[그림 XI-16]은 추가납세 의향을 세대별로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양상은 [그림 XI-15]에서 본 바와 유사하다. 그런데 추가납세 의향의 세대 간 차이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른 세대에 비해 60대 응답자의 추가납세 의향이 일반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 혹은 40대 응답자의 추가납세 의향이 높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특히 2017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한국 유권자들의 추가납세 의향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2017년 이후 홀수 해에는 추가납세 의향이 높고, 짝수 해에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해석하기 까다로운 정보이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시민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양상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9년 이후 그 경향성이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긴 하나, 경제 불평등 인식과는 별개로 추가납세 의향에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대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국가 정체성과 포용

[그림 XI-16] 세대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낼 의향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인종 및 종족 다양성은 예외적일 정도로 낮았지만,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줄만한 외국인 유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야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 문제도 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외국인과의 북한이탈주민을 어느 정도로 포용하느냐의 여부가 사회통합의 한 요인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림 XI-17]은 우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수용 의사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일관된 패턴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흥미롭다. 우선 외



국민 이민자와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는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2013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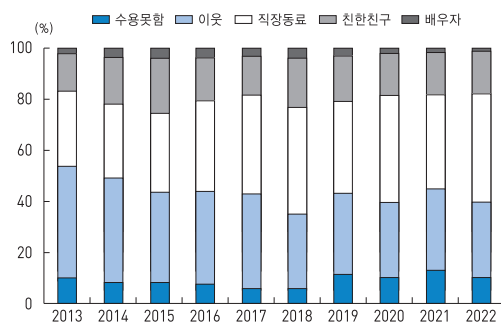
반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배우자로 고려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종합해 보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사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나 공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의사의 경향성은 [그림 XI-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그 이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결과를 보면 응답자 4명 중의 1명이 북한이탈주민을 그 어떤 형태(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수용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배우자로 고려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단일민족이라고 알아 왔던 북한이탈주민을 공적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하겠으나 사적 영역을 공유하고

[그림 XI-1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수용 인식,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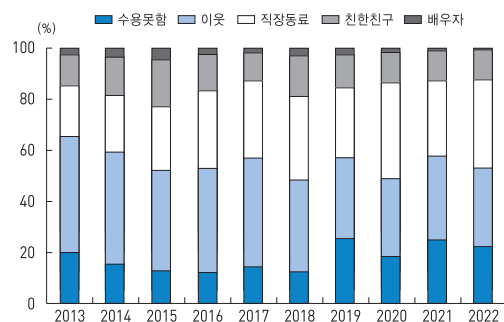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8] 북한이탈주민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싶지는 않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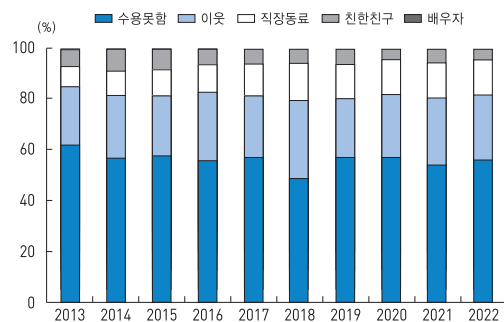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직장에서의 교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상이한 국가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을 공적 영역에 한정하여 받아들이면서 한국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던가,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전통 및 규범과 포용

사회통합 대상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통과 규범 기준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일탈자를 수용하는 작업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측면이다. 한국의 경우 유교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성적 소수자(LGBTQ+)와 한부모가정 자녀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 역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별도로 전과자에 대한 관심도 미미한 실정인데, 형기를 마친 전과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은 재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범영역에서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전과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그림 XI-19]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성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를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이 서서히 강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2022년 현재 여전히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계열적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 XI-19] 성적 소수자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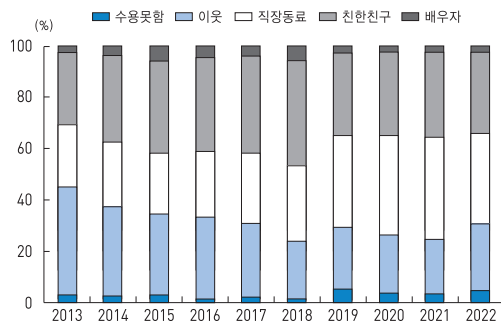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0]은 장애인 수용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수용 인식

은 성적 소수자 수용 인식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을 친한 친구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내려가는 변화를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장애인을 직장 동료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이 비율은 적어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웃으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의 소수자 수용에는 찬성하나 사적 영역에서까지 소수자를 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XI-20] 장애인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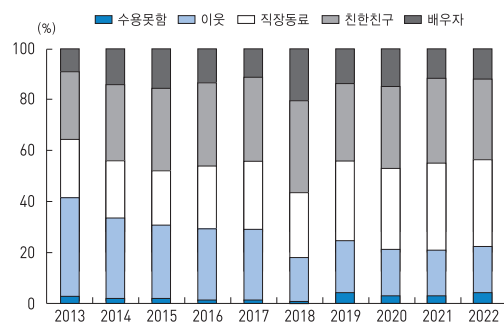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1]에 나타난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한부모가정

자녀를 친한 친구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바뀐다. 그리고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과 달리 한부모가정 자녀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추세가 2018년 이후 꺾이는 경향성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한부모가정 자녀를 직장 동료로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적어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웃으로 둘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확인된 경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국 사람들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입장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지 사적 영역까지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준다. 2019년 이후 한부모가정 자녀를 수용할

[그림 XI-21] 한부모가정 자녀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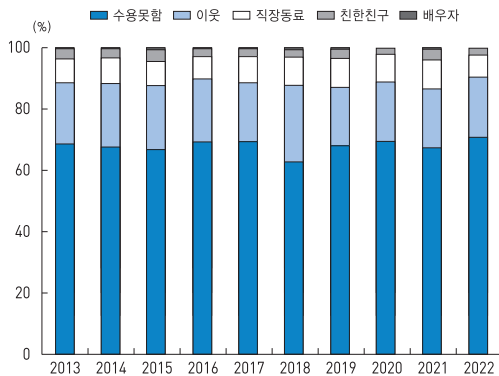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난 사실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과자 수용 인식의 추이가 [그림 XI-2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경우와 많이 다르다. 전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013년 이래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0%선에서 정체되어 있고, 직장 동료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 역시 10% 미만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XI-22] 전과자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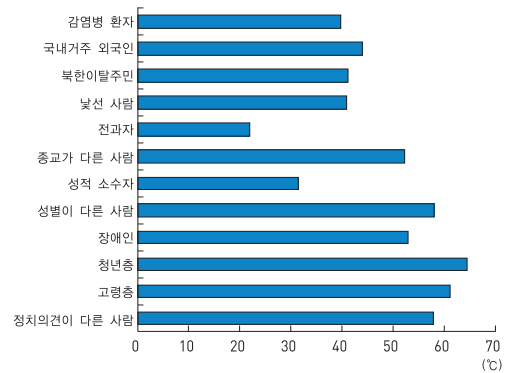
집단별 감정 거리

소수자에 대한 포용 인식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20년부터 조사해 온 집단별 감정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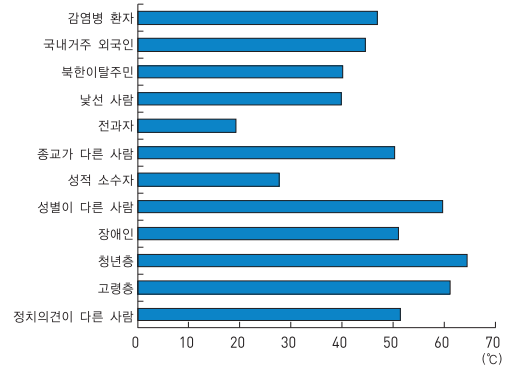
리 문항을 통해 살펴본다. 다만 측정 방법의 차이가 있는 2020년을 제외, 2021년과 2022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XI-23]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깝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차갑게 느끼는(수용을 꺼리는) 집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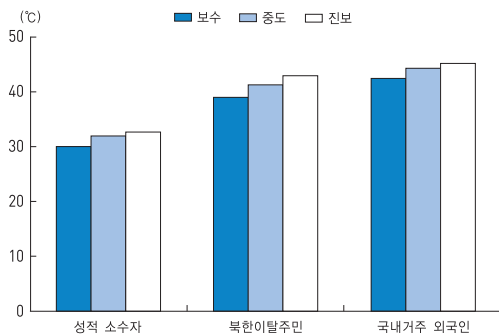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에 근거한 집단들(청년층, 고령층)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흥미롭게도 정치 의견이 다른 사람과 성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긍정적인 편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젠더 갈등의 실체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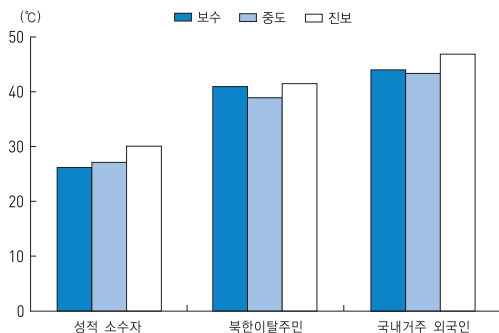
거주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응답자의 이념성향 별로 나눈 결과를 [그림 XI-2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긍정 감정은 국내거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적 소수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명확한 정치 이념별 감정 차이가 나타난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XI-24] 각 집단에 대한 이념 성향별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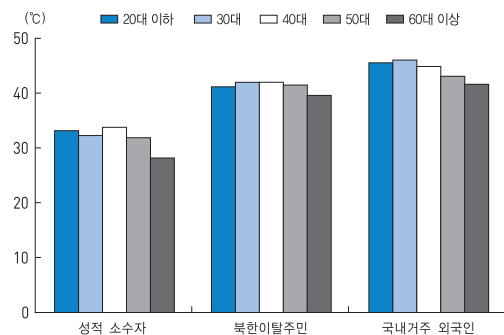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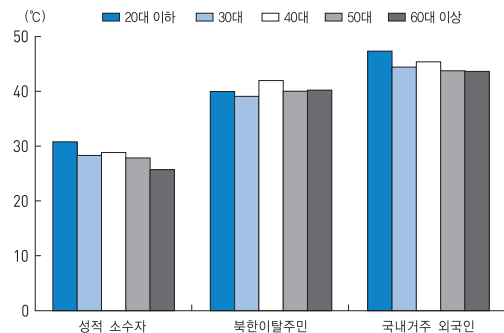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5] 각 집단에 대한 세대별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까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5]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감정을 응답자의 세대별로 나눈 결과를 제시해 준다. 여기서도 소수자에 대한 감정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 성적 소수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도 파악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경향성은 성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명확히 나타나는 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결론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인종 및 종족 다양성이 없는 사회의 특성과 맞물려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포용하는 작업이 사회통합의 과제가 된 상황이다. 크게 보아 (1) 경제 불평등, (2) 국가 정체성, (3) 사회 전통 및 규범 차원에서의 포용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았다. 한국 시민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양상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긴 하나, 경제 불평등 인식과는 별개로 추가납세 의향에 일관된 세대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의 다양성 수용 인식은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느는 추세이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직장에서 교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사적 영역에 외부인을 가깝게 두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자녀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별도로 전과자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을 응답자의 정치 이념별로 구분해 보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수용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성적 소수자와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세대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수용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고, 국가 정체성 기준 소수자와 사회 전통 및 규범 기준 소수자를 사적 영역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서서히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대신 공적 영역에서 이들을 수용

하겠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다. 아직 사회 소수자 수용 문제로 한국 사회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다.